

농가 원유생산 회복을 위한 견인방안 및 목장경영 안정화 방안



김성인
한국낙농신문 국장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목장경영이 위협받기 시작해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꼴이 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그동안 누누이 제기된 문제이지만 지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예년보다 고온현상이 잦은 데다 강수량이 많아 이로 인해 국내 젖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온과 습 스트레스를 받아 유량이 크게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돼 유방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횡수가 늘어났다. 이 결과 보통 유량이 회복돼야 할 10월과 11월에 들어서면서도 오히려 원유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목장경영 수지는 악화됐다. 유량이 줄어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각종 질병 증가로 인해 약값과 치료비 상승은 물론 유방염에 의한 도태증가로 손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11월 말에 구제역이 터져 유량감소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늘어난데다 설상가상 2월들어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수입조사료 가격이 천장부지로 뛰기 시작, kg당 평균 100원 정도가 올랐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지난 연말에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사료업체가 인

상시기를 늦췄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결국 3월 들어 가격을 인상했다. 3월 말을 기점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배합사료 가격이 kg당 40~45원 정도 인상됐다. 이리다 보니 전국 낙농인들 사이에 ‘우유를 짜면 팔수록 손실이 붙어 나니 더 이상 낙농 못해 먹겠다’는 한탄 섞인 하소연이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다. 사실상 필자에게도 걸려온 낙농인들의 전화내용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제역이 안정되면서 낙농인들은 또 다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축산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내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별로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정하는 지역별 양분총량제와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도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고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시 신고·소독을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소독 및 차단시설 미설치, 출입자 기록관리 위반 시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모든 조치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돼야 할 사항이지만 낙농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금과 연결돼 있어 유대현실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장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오는 4월이던 한·EU FTA 국회비준을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낙농인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낙농인들은 유대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목장경영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현실화를 위한 주변 상황은 어떠한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원유부족 내세워 유제품 대량 무관세 조치

농식품부는 지난해 207만 톤보다 10만2천 톤이 부족한 190만5천 톤이 올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젖소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8%

수준 감소하였지만 학교급식우유 등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시판 우유는 충분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원유 예상생산량은 190만5천 톤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지만 학교급식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는 연간 150만5천 톤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수기에도 시판우유 공급물량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제역 피해상황에 따라 유업체별로 원유수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별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과 함께 물가당국은 176%의 고관세로 묶여 있는 탈지분유 2만6천 톤, 전지분유 4천 톤 등 3만 톤의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치즈 2만3천 톤(관세 36%), 버터 3500톤, 가공버터 4만 톤, 생크림 1만7천 톤, 유당 2만 톤, 전지조제코코아 5천 톤도 함께 무관세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물량이 국내에 수입되는 3월 중순부터는 유가공 원료유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의 분석대로 전년보다 10만2천 톤 정도 부족한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물가당국은 전탈지분유 대신 사용되고 있는 관세 36%짜리 혼합분유가 연평균 약 3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도 176%짜리 고관세의 전·탈지분유 3만 톤의 관세를 철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제역으로 인해 부족한 원유를 메우고도 남는 우유대용 전탈지분유를 무관세로 풀어 우유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는 실수요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전탈지분유 3만 톤을 소진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36%짜리 혼합분유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설령 국산 전탈지분유가 있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여기에도 치즈(2만3천 톤), 버터(3500톤), 가공버터(4만 톤), 생크림(1만7천 톤)도 무관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음용유로 사용된 원유를 뺀 45만 톤의 원유 중 상당량은 자칫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을 통해 원유가 엄청나게 부족해 유업체끼리 원유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으로써 지금 소비자들은 모든 유업체들이 우유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해 오히려 정부의 대량 유제품 무관세 조치가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물가안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원유 현실화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유대현실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유대현실화 조치는 지난 2004년에 이어 2008년에 이뤄지면서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거 두차례 유대인상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러나 전 낙농인들이 생존 차원에서 단합된 결집력을 보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내외적인 악조건이 가로놓인 상황에서 과연 유대현실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 낙농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거보다 훨씬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개인 낙농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목장 지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실제 행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유대현실화는 나 대신 어느 누가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낙농인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전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유대현실화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면 전체 낙농인들이 뜻을 모아 정부를 설득하고 소비자를 이해시키는데 과거보다 더욱 더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평범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대내외 상황이 어렵고 불리할수록 낙농인들은 낙농육우협회를 정점으로 더욱 결속을 다져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의 경험을 살려
유대 현실화
이뤄내야...”

